

대학 정원미달 '속출'...부실대학 '퇴출' 한다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재정지원 연계 정원 감축 유도... '위험 대학' 회생 어려울 때 폐교 명령 내년부터 재정 위기 진단...전남 3곳 등 '재정 지원 제한' 8월 최종 결정

올해 전국 대학교 미충원 인원이 4만명을 넘자 교육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회생이 어려운 경우 폐교를 명령하며, 일반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연계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20일 수립·발표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총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수도권이 3만458명에 달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미충원 규모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 더해 내년부터 대학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 수준은 대학의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 세부 지표는 올 하반기 확정한다. 즉 교육부는 대학을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구분 관리하고, 이중 한계대학은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아니지만 재정 상태가 나쁜 '재정위험대학'을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 위기에 있는 위험대학은 정도에 따라 '개선 권고'→'개선 요구'→'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조치를 받는다. 각 단계별로 자체이행계획서 수립·이행, 컨설팅이나 유휴교직원 활용한 시설 전환, 임원 직무 집행 정지 등 강화된 조치를 거친다.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에선 명단 공시와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하지만 여전히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폐교·정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별제를 위한 정산용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관리의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전

남지역 3개 대학을 포함한 18개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284개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평가 결과 18개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I 유형' 5개 대학(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3개교) ▲'II 유형' 13개 대학(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이다.

'I 유형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규 신청·지원과 국가장학금(II 유형)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도 50%로 제한된다. 일반대 2개교는 서울기독대와 예원예술대, 전문대 3개교는 두원공과대, 부산과기대, 서라벌대 등이다.

'II 유형'은 기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뿐 아니라 신규 신청과 지원도 제한되고, 신·편입생의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일반대 7개교는 경주대와 금강대, 대구예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이고, 전문대 6개교는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284개교)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5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 진단보고서를 접수받고, 6-7월 서면 평가 및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정부, 위기의 지방대학 대책 마련을”

전국 교수노조 기자회견

대학교수들이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학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져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시간강사·교직원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까지 실직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21일 오전 11시 광주시

청사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을 요구한다.

이들은 “올해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도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 사이 광주지역의 입학생 수는 약 5000명 가량이 감소했고, 전남지역의 경우는 6800명이

줄어 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등 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학운영비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조원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함께 지방대학의 지원과 육성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 ▲지자체의 지역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 할당 및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 산업과 대학의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사립대학 공적 통제 제도 마련 등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활동

오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 날'을 기념해 20일 광주시 광산구 장록습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협약기관이 합동으로 외래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국보법 폐지’ 국민 청원 10만 돌파

광주시민 2만8000여명 참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이 약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20일 국가보안법폐지광주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19일 오후 3시 21분에 1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9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중 광주시민은 약 2만 8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돼 왔다”면서 “80년 5월 광주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화 운동의 귀감이 되고 있지만, 빨갱이와 폭도로 매도돼 국가보안법 최대 피해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 국회와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육청, 여름철 대비 교육시설 안전점검

광주교육청이 여름철을 대비, 교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부터 6월18일까지 교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와 시설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사전에 발견, 안전 조치할 계획이다. 전체 시설물을 민관합동

점검 또는 자체점검 대상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구조점검이 필요한 건물, 옹벽·사면, 기숙사, 공사장 등 여름철 재해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토질기술사·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펼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광새마을금고 창립 40주년 정기예탁금특판

1년 2.0% (200억한도)

MG 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